

민생물가 특별관리
관계장관 TF
(공개, ⑤번 안건)

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

2026. 4. 9.
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- I. 학원 교습비 동향 및 추진 경과 1**
- II. 학원 교습비 지도·점검 강화 2**
- III. 학원 교습비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... 3**
- IV.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4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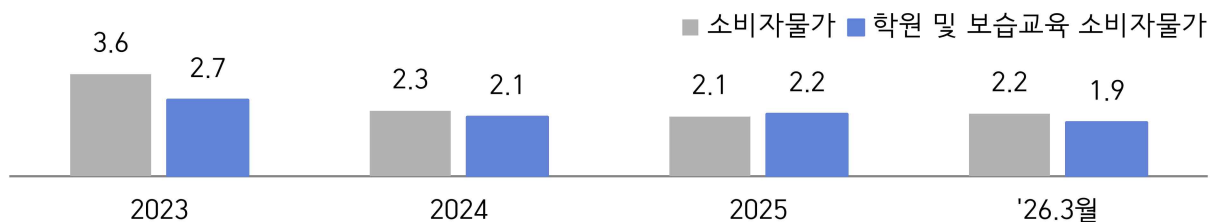
I. 학원 교습비 동향 및 경과

- ◇ 학원 교습비 물가는 교습비 등록제도, ‘교습비등 조정위원회 조정명령’ 등을 통해 물가상승률 범위내에서 관리

□ 학원 교습비 동향

- 학원비 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 유지
 -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
- '25년 3월 대비 '26년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.9%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.2% 범위내에서 관리

<물가 상승률(전년 동월 대비) >



- 소비자물가(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, %) : ('23) 3.6 → ('24) 2.3 → ('25) 2.1 → **(‘26.3월) 2.2**
- 학원 및 보습교육 소비자물가 (") : ('23) 2.7 → ('24) 2.1 → ('25) 2.2 → **(‘26.3월) 1.9**

□ 그 간의 경과

- 물가안정을 위한 교육부-교육청 학원 교습비 등 집중 지도·점검 협의
 - ※ 17개 시·도교육청 대상 점검 회의: 장관 주재('26.2.12.), 차관 주재('26.3.25.)
- 교육부, 시도교육청 학원 교습비 합동 현장 점검 실시('26.3.5., 서울 송파)
 - ※ 서울시교육청, 학원·교습소 교습비 등 특별점검 실시('26.3.24~4.3.)
- 교육부,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 발표('26.4.2.)
 - ※ 학원 모니터링 및 제재 강화 추진: 교습비 안정화 추진 및 위법 학원 제재 강화

Ⅱ. 학원 교습비 지도·점검 현황('26.1월~)

◇ 학원 특별 지도·점검 및 불법사교육행위 신고 접수·처리 등을 통해 교습비 초과징수 등 학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

□ 특별점검 실시

- (개요) 교육청과 협력, 교습비 초과징수, 기타경비* 과다징수,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학원 교습비 편법인상 등 점검

* 기타경비: ①모의고사비, ②재료비, ③피복비, ④급식비, ⑤기숙사비, ⑥차량비

- (대상) 교육청별로 전체 등록 학원·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등 액수가 상위 10% 이내, 최근 5년간 교습비등 상승률이 높은 학원 등 우선 선정

- (지도·점검현황) '26. 4. 3. 현재 15,925 개소 점검, 2,394건 적발(교습비 관련 596건 적발 포함), 3,212건 처분

-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, 등록말소 24건, 교습정지 69건, 과태료 707건 (9.3억원 부과) 등

※ 전년 동기('25년 1월~3월) 대비, 점검수 3,828건 증가, 적발건수 297건 증가

□ 학원 교습비등 모니터링 강화

- (온라인 모니터링)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SNS, 인터넷 상 선행 학습 유발광고, 단기 고액특강, 교습비 초과징수 등 집중 모니터링(~3.31.)

-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, 자율학습비·교재비 징수 22건,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351건 의심사례 적발
→ 교육청 통보 후 조치 예정('26. 4월~)

- (집중신고) 신학기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 접수(clean-hakwon.moe.go.kr)

- '26. 4. 5. 현재, 총206건 접수(미등록교습 68건, 교습비등 초과징수 89건 포함)
→ 110건 점검 86건 적발 116건 처분(고발 및 수사의뢰 4건 과태료 34건 등) 등 조치 중

Ⅲ.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

- ◇ 학원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하고,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인상 등 추진

□ 학원비 불법 인상 등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

- (과징금* 신설)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* 신설

*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내 검토

- (과태료 상향) 교습비 거짓 표시 등 「학원법」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과태료 상한 상향(300만원→1,000만원)

□ 학원비에 대한 민간 감시 기능 강화

-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 강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추진

* 현재 「학원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대한 규제사전심사 완료('26.4.1), 입법예고 예정('26.4~)

<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>

신고 대상 위반행위		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(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)		
		조항	현행	개선
무등록 교습행위	학원법 §6 ① 및 §14 ①	제1호	20만원	200만원 이내
교습비 초과징수	학원법 §15 ④	제3호	10만원	100만원 이내
교습시간 위반	학원법 §16 ④			

IV.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

- ① **(지도·점검 강화)** 학원 교습비 안정을 위한 지도·점검 및 모니터링 지속
 - 교습비 초과징수 등 불법사교육 의심사례 인터넷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후속 점검 및 조치(26.4월~, 한국인터넷광고재단)
 - 학원 교습비 관리를 위한 시·도교육청의 지도·점검 적극 추진('26.4월 예정, 장관 주재 시·도부교육감 회의)
 - 교육부-교육청 교습비·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('26.4월, 서울 강남/ 대구 수성)
- ② **(엄중대응 및 부처협업)** 적발된 사안 중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엄중 조치
 - 고발·수사 의뢰('26.1분기 58건)건에 대한 적극 수사(경찰청) 및 공정세원 관리 여부 등 추가 점검(국세청)
 - 거짓·과장 광고로 「학원법」에 따라 행정 처분된 건에 대해서도 「표시광고법」 위반 여부 등 추가 검토(공정위)
- ③ **(제도 개선)** 신고포상금 상향을 위한 「학원법 시행규칙」 개정 추진('26. 3월~), 과징금 등 제재강화를 위한 「학원법」 개정 추진('26. 상~)
 - 인상된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시도교육청별 관련 규정 개정 등 추진
- ④ **(민간감시 강화)** 학원 등에 대한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 강화
 - 불법사교육신고 카드뉴스, 학교 가정통신문 배포, 전광판 홍보 등(26.4~)